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11.3.(화) 11월 1주차 (제26-55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경제) 중간선거 이후 미국 경제…구조적 제약 속 완만한 둔화 전망 ····· 2
• (규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비상호주의국의 전자제품 시험·인증 제한 발표 ····· 6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규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 부품 탑재 기기 첫 판매 차단 ····· 9
• (수입규제) 美, 中 BGI 그룹 관련 3개 기업을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대상에 추가 ····· 10
• (조선) 한화 필리조선소, 미 해군 중형상륙함 건조 수주 ····· 11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법안) 의회 휴회 ····· 12
• (행사안내) Brookings, CSIS 등 행사 5건 ····· 12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3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4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11.4(수)	• 미국 무역수지(U.S. Trade Balance)
11.5(목)	•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Weekly Jobless Claims)
11.6(금)	• 미시간대학교 예비 소비자심리지수 조사(U.Michigan Prelim Consumer Survey)
11.9(월)	• 월간 도매판매 통계(Monthly Wholesale Trade)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경제) 중간선거 이후 미국 경제…구조적 제약 속 완만한 둔화 전망

- 물가 재상승·고용 둔화·고금리로 '27년까지 경제 성장세 완만한 둔화 전망
- 높은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제약되며 구조적 적자 지속 예상
- 에너지·관세·노동력 감소 등 요인에 기인한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
- 중간선거 결과는 경제 흐름보다 재정·경제정책의 추진 향방을 좌우할 변수

1. 경제 현황

□ 미국 경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3분기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물가 재상승, 고용 둔화, 고금리가 겹치며 구조적 제약이 부각되는 국면

• (경제 성장) 3분기 성장률은 AI 투자와 소비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확대됐으나,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에 못 미치며 저축 여력 축소

- 3분기 실질 GDP는 연율 3.4% 성장해 2분기(2.2%)보다 확대되며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AI 투자·소비·정부지출이 성장 견인(BEA)

- 동 기간 소득은 1.3% 증가한 반면 소비는 3.8% 증가, 저축률은 9월 3.8%로 하락

• (고용) 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됐으나 노동공급 정체로 실업률은 낮은 수준 유지

- 9월 비농업 고용은 2.9만 명으로 8월(13.3만 명)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4.2%로 전월(4.1%) 대비 소폭 상승(BLS)

* 업종별로는 헬스케어(+1.7만 명)·건설(+1.1만 명)·제조업(+0.9만 명)은 증가한 반면, 정보(-1.0만 명)·전문·사업서비스(-0.9만 명)·금융(-0.7만 명)은 감소

• (물가·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연준은 9월 금리 인상 후 10월 동결했으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존재

-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전월 대비 0.6%) 상승해 8월(3.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근원물가는 2.6% 상승(BLS)

〈미국 주요 생활비 항목 물가 상승률 ('26.9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에너지	휘발유	전기	외식	주거비
+3.7%	+2.6%	+20.4%	+34.2%	+4.4%	+3.5%	+3.2%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연준은 9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23.7월 이후 첫 인상)한 뒤 10월에는 3.75~4.00%로 동결

* 시장은 12월 FOMC(12.9)에서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80~85%로 반영

2. 미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 요인

□ (재정) 높은 재정적자와 이자 부담으로 재정 확대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구조적 적자 지속 전망

• 누적된 재정적자·국가부채 및 이자비용 증가로 신규 재정지출 확대와 주요 정책의 재원 확보 부담 지속 전망

- '26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9,920억 달러(GDP 대비 약 6.1%)를 기록, '36년 적자가 GDP의 6.7%, 순이자 비용도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의회예산처(CBO)

- 의회예산처(CBO) 중기 전망에 따르면 공공보유 연방부채는 '26년 GDP 대비 101%에서 '36년 120%로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사회보장연금·메디케어 등 의무지출과 국채 이자비용 증가*로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건전성 회복은 어렵다고 평가(로이터)

* '26 회계연도 국채 이자 지출은 1조 3,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사상 최대

• 연말 의회 예산 협상부터 '27년 부채한도, '28년 감세 만료까지 재정 협상 일정이 이어지며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간선거 이후 '27 회계연도 예산 시한(12.11) 내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1.5조 달러 규모 국방예산 요청을 두고 의회 내 대립 지속 전망(로이터)

* FY2026에는 ACA 보험료 세액공제·이민단속 예산 등 세출 갈등으로 총 3차례 셧다운 발생

- '27년 이후 셧다운과 부채한도 대치가 주요 재정 위험으로 지목되며, 재정 불확실성이 국채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J.P. Morgan AM)

* 주요 감세 조항이 '28년 말 만료 예정으로 연장 여부도 향후 재정 협상의 쟁점

□ (물가) 관세·노동공급·에너지 등 요인으로 물가 압력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어지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고물가 국면 장기화 가능성

• 에너지발 물가 급등과 이민 감소에 따른 인력난으로 당분간 연준의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흐름 지속 전망

- 9월 에너지 물가(전년동월 대비 20.4% 상승)는 헤드라인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10월 중순 갤런당 4.47달러로 이란 전쟁 개시(2.28) 이후 45.5% 상승(BLS)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년 말 3.6%, '27년 말 3.0%로 전망되며 관세·이민·재정 요인이 겹칠 경우 4%를 넘을 위험도 제기(PIIE)

-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행정부 권한 중심으로 운용된 관세 정책 유지로 수입 물가와 기업의 생산비 상승 압력 지속(CSIS)

- 이민 감소에 따른 건설·농업·숙박·돌봄 등 이민 인력 의존 업종의 노동공급 정체로 인력난 업종 중심의 임금·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 지속(Brookings)

□ (금리)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높은 장기 국채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 심화

• 연준은 10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물가 상방 위험으로 추가 인상 압력이 큰 상황

- 9월 PCE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6%(근원 3.1%) 상승해 목표(2%)를 크게 상회, 10월 1년 기대인플레이션도 4.7%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BEA)

- 10년물 국채금리는 4.94%(10.30)로 이란 전쟁 직전(2.27) 대비 약 1.1%p 높은 수준

- 30년 모기지 금리도 11월 기준 7.24%로 1년 전(6.17%)보다 높고 9월 주거비도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가계 주택 구입 부담 가중(WSJ, BLS)

- 연준은 물가 상방 위험에 대응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 전환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워시 연준 의장은 9월 인상 이후 금융 여건이 다소 긴축되며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책은 추가 정보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10.28)

3. 중간선거 이후 전망

□ (경제 전망) 중간선거 결과보다는 재정·물가·금리 등 구조적 변수가 미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美 거시경제의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며 '27년까지 성장세는 완만히 둔화되고, 고물가·고금리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으나 재정 긴축 전환과 고금리 영향으로 미국 성장률은 '26·'27년 각각 2.3%로 머무를 전망(IMF)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2%)를 상회하며, 향후 1년간 기준금리 1%p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Wells Fargo Investment)

□ (정책 대응) 차기 의회는 물가·생활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전망이나, 재정 여력 제약으로 비용 완화 중심의 정책 대응이 예상

• 중간선거의 핵심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물가·에너지·주거비 등 생활비 문제가 차기 의회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부각

- 중간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84%가 생활비를 최우선 현안으로 응답, 응답자의 62%는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WSJ)

- 높은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대규모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주택공급·규제개선·금융 접근성 등 비용 완화 중심의 경제정책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26 회계연도('25.10~'26.9) 연방 재정적자는 1조 9,920억 달러(GDP 대비 약 6.1%)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순이자 비용은 1.05조 달러에 달함(미 재무부)

□ (중간선거 결과) 美 경제의 큰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차기 의회 재정정책의 추진 향방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의회 구도에 따라 추가 감세·재정지원 여부와 예산·부채한도 협상 강도가 달라지나, 높은 적자와 이자 부담으로 신규 경제정책 시행은 제한적 예상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로이터(10.30), Wells Fargo(10.15), BEA(10.29), BLS(10.14), 무역관 자료 종합

(규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비상호주의국의 전자제품 시험·인증 제한 발표

■ 美 FCC, '28.12.1일부터 비상호주의국 소재 기관의 FCC 장비인증 관련 시험·인증 업무 제한
■ 비상호주의 경제권에는 중국, 인도 등이 해당되며,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신규 적용
■ 미국 내에서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나, 일부 업계는 시험비용 및 인증기간 증가 가능성 제기

1. 개 요

□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비상호주의국 시험·인증기관 관련 규정 확정**(10.29)

- **FCC는 미국 시장에 출시되는 전자·통신기기의 장비인증**(Equipment Authorization)**과 관련해 시험·인증기관의 소재지 요건을 강화**

- FCC 인정 시험기관(Test Lab), 통신인증기관(TCB) 및 시험기관 인정기관을 미국 또는 '상호주의 경제권(Reciprocal Economy)' 소재 기관으로 제한

- 상호주의 경제권은 미국과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이에 준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을 의미

- 중국 본토는 현재 관련 상호인정 체계가 없어 비상호주의 경제권에 해당하며, 미국·상호주의국 소재 기관이 중국 등 비상호주의국에서 실질적인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규제

- **비상호주의국 소재 시험·인증기관은 약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8.12.1일부터 FCC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FCC 장비인증 신청부터 적용되며, 기존 승인 제품과 시행일 이전 접수된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 **FCC는 인증 절차에 대한 감독 및 시험업무의 지역적 집중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

- **FCC는 비상호주의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내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집행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

- 규제 배경으로 일부 시험기관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시험결과가 확인된 사례 언급

- FCC에 따르면 '25년 장비인증 관련 시험의 82.3%가 중국에서 수행된 반면, 미국 내 수행 비중은 3.6% 수준

2. 주요 내용

□ FCC 장비인증 관련 업무 수행 지역을 미국 및 상호주의 경제권으로 제한

- **이번 규정은 시험기관의 국적보다는 기관 소재지와 실제 시험·인증 업무 수행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

- 이에 따라 중국계 기관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시험소도 FCC 장비인증 관련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제품의 중국 내 생산·조립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며, 연구개발·사전시험 등 FCC 인증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업무는 별도 취급

- 한국은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인 APEC TEL MRA를 운영 중이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 한국 소재 시험기관은 현행 상호인정 체계에 따라 활용 가능

〈FCC 시험·인증기관 관련 주요 규정〉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기관	• FCC 인정 시험기관(Test Lab), 통신인증기관(TCB), 시험기관 인정기관
허용 지역	• 미국 및 MRA 등 상호인정 체계를 갖춘 경제권
제한 지역	• 중국 등 미국과 관련 상호인정 체계가 없는 비상호주의 경제권
적용 시점	• ’28.12.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장비인증 신청
적용 업무	• FCC 인증 관련 시험·기술검토·인증·인정 업무

* 기존 승인 및 시행일 이전 접수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자료: FCC 보도자료 및 현지 언론 보도 종합]

□ FCC, 시험·인증제도 관련 추가 개선 검토 계획

- **FCC는 이번 최종규정과 함께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해 시험·인증기관의 관리 및 장비인증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

- 미국 및 상호주의국 내 시험역량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도 후속 논의 대상에 포함

〈FCC의 대중국·외국산 장비 관련 주요 조치 경과〉

날 짜	주요 내용	비 고
‘21.11월	• 「장비보안법」 제정: FCC가 규제대상 장비를 승인하지 못하도록 규정	• 신규 인증 제한 근거 강화
‘22.11월	• 화웨이·ZTE·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후아 5개사의 신규 장비 승인 금지	• 특정 기업·장비 중심 규제
‘25.5월	• Bad Labs 규정 채택(적대국이 소유·통제하는 시험소 배제)	• 시험·인증기관으로 규제 확대
‘25.12월	• 외국산 드론·핵심부품 신규모델 승인 금지	• 외국산 장비 규제 확대
‘26.3월	• 외국산 소비자용 라우터 신규모델 승인 금지	• 외국 생산 장비 규제 확대
‘26.7월	• 외국 생산 첨단 로봇·전력 인버터 Covered List 추가	• 신규 모델 인증 제한
‘26.10.29	• **시험소 상호주의 규정(FCC 26-73) 의결** * 이번 규정의 선행 조치는 ’26년 4월 발표	• **’28.12.1 시행 예정**

[자료: FCC 발표 및 관련 규정 종합]

3. 현지 반응

□ 美 업계, 상호주의 및 인증 신뢰성 강화 취지와 함께 시험역량 확보 문제 주목

- **통신산업협회(TIA)는 FCC 장비인증 제도의 보안·신뢰성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

  - 최종안 공개 이후에는 약 2년의 전환기간 부여와 함께 미국·상호주의국의 시험역량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허드슨연구소 등 일부 정책기관도 미국 시험기관에 대한 상호주의와 국내·동맹국의 시험인증 역량 확보 차원에서 MRA 체결국 여부에 따른 구분을 지지

□ 소비자기술 업계는 시험기관 선택 축소에 따른 비용·인증기간 증가 가능성 언급

- **소비자기술협회(CTA)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제한이 시험역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

  - 중국 등 비상호주의국 시험소를 이용해 온 시험장소 변경에 따른 운송·공급망 비용과 제품 출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현지 법률업계는 관련 기업이 ’28.12월 시행에 앞서 기존 시험기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 또는 상호주의국 내 대체 시험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FCC 보도자료(10.29), 로이터(10.29), 인사이드(10.30) 및 기타 워싱턴DC 무역관 보유자료

(규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 Covered List 부품 탑재 기기 첫 판매 차단

- **(개요)** 연방통신위원회(FCC) 공학기술국(OET)이 대시보드 카메라와 무선 영상 송신기 2종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를 금지 (10.22.)
  - 두 제품에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HiSilicon, Covered List* 등재)의 칩이 탑재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10.13. 발효된 부품 규정 시행 후 첫 집행 사례

  * 국가안보 위험 목록인 Covered List(규제 대상 장비·서비스 목록)에 등재된 장비는 관련 FCC 장비 인증 규칙에 따라 신규 인증이 제한되며, 신규 모델의 미국 내 수입·판매·마케팅이 사실상 차단될 수 있음.

- **(상세)** 이번 조치는 완제품 생산 주체가 아니라 내장 부품을 기준으로 인증을 거부한 첫 사례로, 기존 규정의 우회 경로를 차단한 것이 핵심
  - 브랜든 카(Brendan Carr) FCC 의장은 “감시 칩을 탑재한 영상 기기는 국가와 국민에게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며, “미국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규정을 계속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성명

〈Covered List 부품 탑재 기기 규제 조치개요〉

구분	내용
차단 제품	대시보드 카메라 1종, 무선 영상 송신기 1종 (제조사와 모델명은 미공개)
규제 부품	하이실리콘(화웨이 자회사) 생산 스마트 칩
적용 규정	Covered List 등재 기업의 로직 탑재(logic-bearing) 하드웨어 부품을 포함한 기기의 인증 금지 (10.13. 발효)
조치 기관	FCC 공학기술국(OET)

- **(전망)** FCC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부품 단위 공급망 실사와 Covered List 등재 여부 확인이 미국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
  - 제조사·수입사는 완제품 외에 ① 부품 공급사, ② 해당 부품의 Covered List 등재 여부, ③ 조건부 승인 등 예외 적용 범위를 확인 필요
  - FCC가 "계속 강력 집행" 입장을 밝힌 만큼 유사 제품에 대한 추가 차단 가능

▪ 자료원 | FCC 보도자료(10.22.), 로이터(10.22.)

(수입규제) 美, 中 BGI 그룹 관련 3개 기업을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대상에 추가

- **美 국토안보부(DHS), 중국 유전체·생명공학 기업 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 ('26.10.29. 시행)

  - 신규 등재 기업은 BGI 그룹 관련 기업인 BGI Genomics, MGI Tech, Shenzhen BGI Technology 등 3개사로, UFLPA 명단 등재 기업은 총 190개사로 확대

  - 美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해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 인력 모집·이송 등에 활용되는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검사 역량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 BGI Genomics와 Shenzhen BGI Technology는 신장 지역 유래 식물·동물·인체 유전물질 검사와 관련해 별도 규제 명단에도 추가 등재

- **신규 등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미국 수입 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원칙 적용**

  - UFLPA 등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강제노동 생산으로 추정되며, 수입업자가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추정은 뒤집지 못할 경우 미국 내 수입이 금지

  - 美 DHS 장관 멀린은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 감시와 연계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익 창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규제 집행 의지를 표명

  - 이번 조치로 BGI 계열사가 생산하는 유전체 분석 장비·시약·관련 기술 및 서비스와 연계된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규제·통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

▪ 자료원 | 관보(10.29), DHS(10.28), International Trade Today(10.28)

(조선) 한화 필리조선소, 미 해군 중형상륙함 건조 수주

-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중형상륙함(LSM)* 1척 건조 예정, 추가 3척 옵션 포함**

  * 해병대의 도서·해안 간 이동과 대함미사일 운용 거점 구축을 지원하는 함정

- 사업 건조관리사인 TOTE Services가 발주한 2억 6,900만 달러 규모 계약으로, 한화디펜스USA가 수주하고 한화 필리조선소가 건조를 담당할 예정

- **미 해군, 중형상륙함 건조 사업에 외부 건조관리사 첫 활용**

- TOTE는 지난 7월 최대 8척의 LSM 건조를 관리하는 22억 달러 규모 계약을 수주했으며, 미 해군이 외부 건조관리사에 사업 관리를 맡긴 첫 사례

- 같은 달 건조사 선정 공모를 진행했으며, 가격 경쟁력과 하도급 계약조건 수용 등을 근거로 한화디펜스USA를 첫 건조사로 선정했다고 설명

- 한화 필리조선소는 현재 TOTE가 관리하는 미 해사청 국가안보 다목적선도 건조 중

▪ 자료원 | 미 해군연구소(10.30)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	-	-	▪ 의회 휴회 중

* 11월 3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Brookings	11/9(월) 2:00 pm	〈What comes next: The consequences of the 2026 midterm elections〉 ▪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권력 구도 변화가 향후 미국 정치 지형과 워싱턴의 정책 우선순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	링크
CSIS	11/9(월) 10:00 am	〈Press Briefing: Previewing President Trump's Trip to Asia〉 ▪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사전 점검을 위한 온라인 언론 브리핑, 이번 순방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포함.	링크
CATO	11/12(목) 11:00 am	〈Disrupting Politics:A Front Row Seat to the Collision of Technology & Democracy〉 ▪ 인공지능과 정치적 허위정보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 그리고 페이스북 사례가 표현의 자유, 플랫폼에 대한 정부 압력, 기술기업의 공론 영향력 논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	링크
Peterson (PIIE)	11/12(목) 1:00 pm	〈2026 midterm election debrief〉 ▪ 2026년 중간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선거 결과와 새로 구성될 의회가 미국 및 국제 경제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할 예정	링크
Peterson (PIIE)	11/13(금) 9:30 am	〈Labor markets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imes of change: AI and demographic shifts〉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AI 확산,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분업 구조 재편이 노동시장과 고용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	링크

* 11월 3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To Tame the Fastest Drivers, States Deploy Speed-Limiting Devices on Cars (버지니아·워싱턴D.C., 과속 막는 GPS 장치를 면허정지 대안으로 도입)
	버지니아주와 워싱턴D.C.는 일부 과속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대신 GPS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속페달을 밟아도 제한속도를 넘기 어렵지만 제한속도 오인식과 이용료 부담도 제기
The Washington Post	Why only one group of Americans is increasingly likely to have a third child (셋째 자녀도 경제력 따라…소득 상위 1% 가구서 다자녀 비중 높아)
	미국 소득 상위 1% 가구 중 자녀가 셋 이상인 비율은 49%로 대부분의 다른 소득계층(40~43%)을 웃돌았으며, 보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중산층의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
The New York Times	'Devastating' Damage as Hard Rains and Flash Floods Batter the Southwest (美 남서부, 폭우·돌발홍수로 대피령…투표소 운영도 차질)
	애리조나·콜로라도·뉴멕시코·유타주에서 폭우와 돌발홍수로 도로 유실과 주민 대피가 잇따랐으며,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콜로라도 일부 지역은 대체 투표소 마련과 이재민 투표 지원에 나서
AP News	Early voting jumps across Senate battlegrounds as millions more Americans vote ahead of Election Day (美 중간선거 사전투표 급증, 상원 경합주서 증가세 두드러져)
	미국 중간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4,300만 명을 넘어 2022년 같은 시점보다 약 1,000만 명 늘었으며, 텍사스는 50%, 메인·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캔자스는 30% 이상 증가
Bloomberg	US Gas Prices Rise Above $4 for the First Time on Election Day (중간선거일 美 휘발유 가격, 사상 처음 갤런당 4달러 상회)
	미국 중간선거일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 갤런당 4달러를 넘어 4.13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유도 6.29달러로 역대 선거일 최고치를 나타내 유권자의 기름값 부담 가중

* 미국 동부 시간 11월 3일 14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워싱턴DC무역관 주관「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시사점」웨비나

- (제목)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우리 기업 시사점
- (링크) : 웨비나(zoom) 바로가기
- (일시) 한국시간 기준 '26.11.5(목) 10:00~11:00
  미 동부시간 기준 '26.11.4(수) 20:00~21:00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32	美 데이터센터 산업·인프라 및 정책 동향	2026.10월
US26-31	캐나다 대응 관세 발효 및 美 338조 수입금지 조치 주요 내용	2026.10월
US26-30	드론 정책 사례로 본 미국의 통합적 안보통상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26.9월
US26-29	미국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와 우리 기업 시사점	2026.8월
US26-28	美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조치 및 소송 동향	2026.8월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